

檢·警 수사권조정 놓고 또 설전 형소법 개정에 관해 2시간여 공방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3일 경경 관계자들이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토론회에 모여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처음부터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경경 관계자들은 수사권조정 문제 핵심인 경찰수사에 관한 검찰 지휘와 형소법 개정 문제 등을 두고 2시간여간 공방전을 펼쳤다.

김학배 경찰청 기획수사팀의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인 수사구조는 실제 수사권을 계승한 것으로 파소적인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런 독점적 구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기획수사팀의관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경계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리에 맞게 경경이 합리적으로 수사권을 조절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회재 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은 “검찰은 지난 8개월동안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논의를 해왔으며 경찰수사에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단지 독자적 수사권을 달리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경찰 요구처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수사가 이원화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방식이라면 수사체계에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고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운하 수사권 조정팀장을 “대부분 사건에 있어 경찰이 독자적인 수

사를 펴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라며 “영장신청과 사건종결권은 검찰이 통제하되 수사 사건에는 검찰이 개입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팀장은 또 검찰 수사경제와 관련 “현재 검찰 수사를 겨누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없으며 수사지휘로 부당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국민이 어디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훈 부부장 검사는 “경찰은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승치전까지 검사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일부 민생사건에 대해서는 승치전 검사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수사조정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밝혔다.

차경환 부부장검사도 수사, 소추기관 분리 주장을 대해 “외교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제 2 외교부를 만들 수 있으며 경찰이 치안을 잘못한다고 해서 검사가 맡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주장을 맞았다.

김 기획수사팀의관은 검찰 수사권 개선과 관련해 “검찰이 여려 부분 개선했다고 하지만 수사권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전혀 개정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경찰의 자율적인 수사를 보장하려면 형사소송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피력했다.

차 부부장검사는 “형소법 개정문제 관련해서는 단지 경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인권이나 권력구조 전제와 연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그림 속에서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형집행장 남발” 인권위 진정

경찰간부, 인권유린적 지시 거부 못하는 건 노예조항 때문

현직 경찰 간부가 검찰이 벌금·구류 등 재산형 대상자에 대해 형집행장을 남발해 이를 강요 받는 경찰과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조정 문제를 놓고 침례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인권 침해는 경찰과 경찰의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되며 “형집행장이 매년 60만~70만건이나 남

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경찰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법 체포, 긴급체포 그리고 영장에 의한 체포뿐이지만 경찰의 벌금미납자 체포라는 활동한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현장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자괴감을 느낀다”며 “검찰 업무때문에 그 비난은 경찰이 모두 뒤집어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형집행장의 남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수차례 대검찰청에 글을 올렸지만 전혀 개선

정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당사자에 대한 벌금납부 통지조차 단 1차례만 한 후 즉시 수배조치와 함께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집행장은 사실상 구속 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에 대해 발부하는 것”이라며 “형집행장이 매년 60만~70만건이나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경찰이 이런 위법적 인권유린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데는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노예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형집행장 문제는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과 일방적인 지

배 종속 관계에 있을 때 어떤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검·경 관계를 꼬집

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경찰 뿐 아니

라 사법경찰관이 있는 모든 국

가기관과 일방적인 지배복종 관

계를 설정하여 놓았고 사법경찰

관이 있는 국가기관은 검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지가 보이지 않아 결국 검찰의 인권 유린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게 됐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경찰이 이런 위법적 인권유린적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데는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노예조항 때문”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형집행장 문제는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과 일방적인 지 배 종속 관계에 있을 때 어떤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검·경 관계를 꼬집 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경찰 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있는 모든 국

가기관과 일방적인 지배복종 관

계를 설정하여 놓았고 사법경찰

관이 있는 국가기관은 검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스쿨폴리스제」 학교서 좋은 반응

전국 확대실시 바람직



스쿨 폴리스가 학생들과 상담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약 한달 가량 운영한 결과 일부 교사들이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학교 당국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꼭 필요 한 제도이며, 스쿨폴리스로 인해 자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경찰청에서는 이번 스쿨폴리스 제도를 위해 기획팀은 1일 1개교 방문, 애로사항 청취 및 학교장 등과 효율적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으며, 지원팀에서는 관할서장, 지구대장, 여성계장이 주1회 스쿨폴리스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하는 한편 학교와 협조하고, 관할 지구대와 형사는 우범지역, 유해 환경 단속을 벌이며 학부모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들은 스쿨폴리스의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몸이 아프거나 선배들로부터 괴롭힘 등을 상담하러 스스로 스쿨폴리스 사무실을 찾기 시작하는 한편 스쿨폴리스들이 순찰시 깔끔이 인사하는 등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던 일부 교사들도 약 4주간의 활동사항을 지켜보고 있지만 부정적 시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학교 당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이제는 자녀들이 학교 내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거부 믿으며, 스쿨폴리스 제도가 대부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쿨폴리스 제도는 교내 활동의 시간적·공간적 제약, 지원 활동 등 학교 방문에 대한 일부 교사들의 거부감 표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향후 법률상담, 등·학교길 교통지도, 유해환경 정화와 학생·교사 관련 경찰관서 업무 지원 등 공감대 형성 등 학생·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활동을 집중함으로서 실현 가능성 확보 차원의 다양한 접근방법을 추가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쿨폴리스의 자율활동을 적극 지원해 학교를 극대화하며, 요원간의 수법사항 등 정보 교환, 전문 상담소 등 협력 체계구축, 유관 기관이나 단체들과 협의해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절도는 10代, 강도는 20代, 성폭행은 30代

- 경찰청, 1분기 범죄 작년보다 17% 감소 발표 -

범죄 피의자를 나이별로 분석한 결과 절도는 10대, 강도는 20대, 성폭행은 30대, 폭력은 40대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에는 폭력이, 금요일은 강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1분기 치안지표’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에서 발생한 총 범죄는 39만3천76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2% 감소했으며 5대 범죄(강도·절도·살인·폭력·성폭행)도 9만9천124건으로 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절도는 19세 이하가 31.5%로 가장 많았고 20-30세 22.7%, 31-40세 20.1%, 41-50세가 16.6% 순이었다.

성폭행은 31-40세가 전체 피의자의 34.1%, 41-50세가 27.4%, 20-30세가 24.9%였으며 폭력 피의자의 29.8%는 41-50세, 27.9%는 31-40세, 22.7%는 20-30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도 피의자의 29.7%는 20-30세였고 19세 이하는 28.2%였다.

요일별로는 강도 사건은 금요일(17.4%)에 가장 많이 일어났고 성폭행은 화요일(15.7%)과 토요일(15.1%), 폭력은 토요일(15.5%)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인구 10만명당 연간 범죄건수를 추정한 결과 살인 1.9, 강도 9.7, 성폭행 11.8, 절도 295, 폭력 511건으로 폭

시간대별로는 주요 범죄 모두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으며 절도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도 24%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빈집털이와 금융기관 주변 날치기 등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의 47.1%가 사는 7대 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대전·광주)에는 강도의 53.6%, 폭력 53.4%, 성폭행의 50.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살인(44.5%), 절도(45.1%) 사건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범죄 유형별 증감률을 보면 절도와 살인은 각각 4.6%와 0.8% 증가한 반면 강도는 26.1%, 성폭행은 6.4%, 폭력은 9.0% 감소했으며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도 10-27.3% 줄어 경제회복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

또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3.3명(연간 추산)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졌고 올 들어 집회·시위는 8.5% 늘었으나 폭력시위와 경찰부상자는 33.3%와 82.3% 감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1분기 자료를 토대로 인구 10만명당 연간 범죄건수를 추정한 결과 살인 1.9, 강도 9.7, 성폭행 11.8, 절도 295, 폭력 511건으로 폭

력사건을 제외한 주요 범죄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폭력 사건은 일본의 10.4배, 미국의 1.7배, 러시아의 4.0배, 독일의 3.0배, 프랑스의 1.3배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故 서영호 치안감 영결식 거행

新任 女警 졸업식 연습지휘중 쓰러져

지병에 격무까지 겪쳐 순직한 서영호 치안감(중앙경찰학교)에 대한 장례식이 5월 23일 오전 10시 경찰청사에서 오영교 행정

자치부

장관

허준영

경찰청장

구홍일

경우회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및 유가족, 내빈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警察葬으로



엄숙하게 거행되어 故人을 추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故 서영호 치안감은 지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위에 이 사설을 숨기면서 다음 날 있을 신임 여경 졸업식 예행 연습을 지휘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조사를 통해 『동지께서 남기신 위업과 발자취가 경찰사에 영원히 빛나게 하고 당신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꿈들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묵묵히 앞을 향해 전진할 것을 머리 속에 다짐한다』고 밝혔다.

황당 뉴스

1살배기 절도 공범으로 체포

멕시코에서 아버지의 절도범 행 혐의에 있었던 이유로 1살배기 어린 아이를 체포한 경찰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

지난달 21일 멕시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유카탄 주 푸에르토 프로그레소 시내 한 슈퍼마켓